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編輯人 李 鍾 容
印 刷 人 張 玉 煥
編輯局長 田 根 澤

發 行 所
社團 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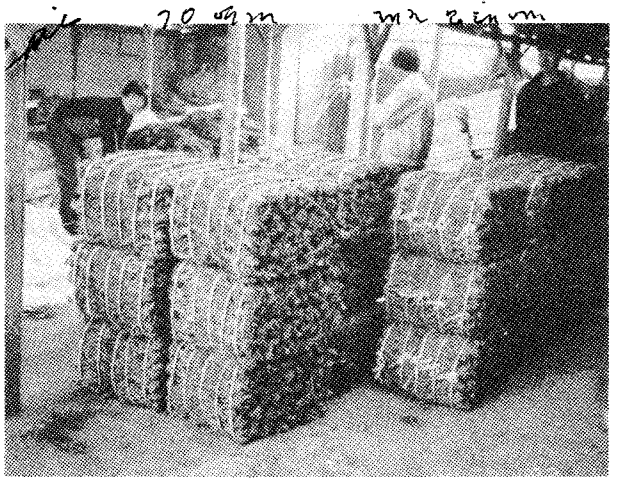
◉신임사무국장 중책을 맡고 …… 3면
◉현장탐방(포천) …… 4면
◉김천작목반을 찾아서 …… 5면
◉재배교실(하수오) …… 5면

규격화 특혜 인상

70여개 제조업체에

"현실무시한 처사" 반발

반대서명 총6천8백21명



◇농민이 생산, 가공한 한약재

국산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규격화 철회를 요구하는 생산 농민들의 진정서와 서명날인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생산회원들의 서명날인 전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1천8백67명, 경상북도 7백61명, 경상남도 3백80명, 충청북도 2백50명, 충청남도 1백60명, 강원도 1천1백3명, 경기도 3백명, 기타지역 2천여명 등 총 6천8백21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생약재배 농가들의 이같은 반대 여론하고는 무관하게, 보사부는 본래의 의지대로 규격화 강행 운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18일 보사부는 한약재 규격화 관리규정 초안을 마련 발표하는가 하면, 지난달 17일 한국생약협회 강원도 영월군 실호섭소장이 보사부에 올린 진정서에 대한 답변에서 애매모호한 문구를 이용, 농민들로 하여금 혼돈을 초래하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사부 답변 내용에 따르면, 「농민들의 단순가공행위는 농산물 생산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생산된 한약재의 한약방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고는 정작 「한약생산자가 규격품을 제조코자 할 경우, 규격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 내용에 따르면 농민들이 직접 생산, 가공한 것은 규격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규격품을 제조키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 규격화고시와 관련 보사부 엽부지침에 따르면 한의원 한약방에서 규격품만을 진열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놓고 『규격품이란 원료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가진 공장에서 포장된 것이라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사실상, 생산자가 직접 가공한 생약재의 판로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두고 충남 논산군 이문섭씨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농민이 직접 가공 포장한 생약의 품질이 제조업소를 거쳐 나온 「규격품」과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품을 「규격품」과 「비규격품」으로 나누는 것은 70여개 제조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무어냐』고 울분을 토했다.

생약회원 1만3천여명 돌파

전국적으로 생약재배 회원 배가운동이 그 실효를 거두고 있다.

7월 30일 현재, 강원 1천3백55명, 경기 1백69명, 충북 2백87명, 충남 3백58명, 전북 4천2백52명, 전남 7백69명, 경북 1천4백39명, 경남 6백94명, 제주 2백명 등 삼도시호재배회원 3천61명을 포함 총 1만2천5백84명이 본 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사무국은 금년말 까지 생약회원을 2만명으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로써 본 협회는 지부 12개소, 분사무소 1백54개소, 공판장 41개소, 임원단 32명, 중앙회원 4백여명, 지방회원 1만3천여명에 이르는 방대한 전국조직망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본 협회는 수입약재에 밀려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우리 생약의 생산을 활성화시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용 회장은 『70년대에 수천만불씩 수출하던 우리 생약재가 국제경쟁력을 잃게된 것은 외국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원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생약 재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되는대로 방치했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 생약재를 수출하는 품목도 있고 내수용으로 재배되는 품목도 수십종에 이르고 있어, 이를 계획생산, 보전시켜 나간다면 양질의 생약재는 물론이고 우리생약의 국제경쟁력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생약살리기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협회는 생산자 회원 및 학계, 언론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농진청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생약살리기운동추진본부」(가칭) 발족을 서두르고 있다.

추진본부가 구성이 되면, ▲품질 고부가가의 생약의 개발 ▲수출전략 품목의 단지조성 ▲수입대체 품목의 단지조성 ▲국내산 생약과 수입생약의 비교 분석 ▲학술발표회를 통한 우리생약의 우수성 홍보 등 우리생약살리기 사업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보건사회부 답변내용

1. 귀하가 '94.8.9자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가. "규격품대상한약지정고시"는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판매업자인 한약 도매상, 한약방, 약국 등에 대하여 규격품 한약만을 판매하거나 또는 조제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므로,

나. 동 고시가 시행되더라도 농민 등이 직접 재배 또는 채취한 한약재를 세척건조, 절단하는 단순가공행위는 의약품 제조행위가 아닌 농산물 생산과정의 일부로 보아 약사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생산된 한약재를 농산물로 공판장이나 재래시장은 물론 한의원, 한약방 등에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 또한 한약재 생산자가 규격품을 제조코자 할 경우에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규격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여건을 갖추고 규격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의서에 연서한 다른 한양생산자에게도 동 회신내용을 전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사회부장관〉

황기 피해 속수무책

뿌리에 푸른 곰팡이

황기 뿌리에 푸른곰팡이가 발생, 원인을 몰라 속수무책인 채 농신을 애태우고 있다.

푸른곰팡이가 생기면서 뿌리가 썩고 잎이 말라 죽어가는 이같은 현상은 지난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 현재 경기도를 비롯 다른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40% 정도의 수확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온에 약한 당귀의 경우 고사율이 90%로 가장 피해가 심각하고, 삼도시호의 경우에도 경북 금릉지역이 60%, 상주지역 30%, 문경지역 30%, 충남 서산지역 40%, 전남 여천지역 20%, 고흥지역 20%, 신안지역 30%, 완도지역 30%, 제주도 지역이 30~50%가 고사한 상태다.

강원도 정선의 경우만 해도 똑같은 현상으로 3~5년 근도 모두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포천군 영중면에서 1만평 약초농사를 짓고 있는 장병조씨에 따르면 『약국에 갔더니 황기엽병이라 해서 약을 사다 뿌려봤지만 아무리 독한 약도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동성읍 오동리 김영도씨는 『1만2천여평중 2천평을 제외하고는 올 약초농사를 다 망쳤다』고 토로하면서 『퇴비를 많이 할수록 많이 죽고, 조금 덜한 곳은 그피해가 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포천군 이인기 소장은 『군 농촌지도소와 농약제조회사 등에 그 원인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별 뾰족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너무 높은 기온 때문인 것 같다』며 추측.

이대로 방치될 경우 피해상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확기 외에도 올 여름 유래없는 폭염으로 인해 약초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사하는 율이 높아, 올 한해 약초재배의 고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農安法 재개정 촉구

농업살리기운동본부

우리농업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5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종로구 YMCA에서 「농안법전면재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발족식」을 갖고 현행농안법을 재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인사

「任」

▲중앙본부 사무국장 전근택(94년8월1일부, 승진 발령)
▲전북 순창군 사무소장 정승환(94년8월16일부)
▲전북 전주시 사무소장 정진관(94년8월16일부)

「免」

▲충북 충주시 공판장장 임병시(94년8월16일부)

「명칭변경」

▲전북 완주군 사무소장 강이상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사무소장으로
▲전북 완주군 공판장장 이정권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공판장장으로
▲전북 전주시 공판장장 양봉식을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판장장으로

(94년8월16일부)